

보도시점 2026. 6. 1.(월) 조간  
2026. 5. 31.(일) 12:00

배포 2026. 5. 29.(금)

통합돌봄 시행, 그냥드림 전국 확대 등 **더 따뜻한 복지!**  
의대정원 증원, 지역 의사제 도입 등 **더 가까운 의료!**  
제약바이오, K-뷰티 역대 최고 수출 등 **더 성장하는 K-바이오헬스!**  
- 이재명 정부 1주년 보건복지 주요성과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①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②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③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④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라는 4대 핵심분야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 < 4대 핵심분야 주요성과 >

#### 1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 ⇒ ①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

- 생계급여 최대 금액 지급(4인가구 최대 월 207.8만 원), 26년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 ② 국민 모두의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 국민연금기금 역대 최고 수익률 달성('25, 18.82%), 군·출산 크레딧 확대

##### ③ 전 국민 먹거리 안전망인 그냥드림 코너 전국 신속 확대,

- '26.5.18일 본사업 전환(158개 시군구280개소), 국민 약 10만명 이용위기가구 1,553가구 발굴

##### ④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자활지원체계 강화

-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제공(115.2만개), 역량강화비 확대 등 청년 자활 강화

#### 2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 ⇒ ① 과학적 수급추계 및 민주적 논의 기반 의대정원 증원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총 7차례 논의, 5년간 연평균 668명·총 3,342명 증원 확정

## ②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6대 필수 입법 완수

- ①필수의료 민형사 부담완화(의료분쟁조정법), ②지역의사 양성(지역의사법), ③공공의료 인재 양성(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④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필수의료법), ⑤국립대병원 육성기반 마련(국립대병원 설치법), ⑥환자 기본권리 보장(환자기본법)

## ③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계 개선

-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달빛어린이병원 33개소·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 확충

## ④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70개 신규 추가, 관리급여 도입

## 3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 ①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체계 구축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26.3.27.~), 일 평균 717명 신청·1인당 3.3건 서비스 연계

### ② 아이 키우기 더 좋은 환경 조성

- 이동수당 연령 확대 및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전국 343개소 야간연장돌봄 제공

### ③ 장애인 돌봄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전문수당 인상

## 4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 ⇒ ① K-바이오헬스 수출액 역대 최고치 달성

- 제약·바이오 수출액 100억 불 최초 돌파, K-뷰티 수출액 114억불 역대 최고 실적, 외국인환자 200만 명 최초 달성

### ② 현장 목소리 기반 바이오헬스 규제 합리화

-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진입 기간 단축(490→80일),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 승인

### ③ 바이오헬스 산업별 육성전략 확충

- 임상3상 특화펀드 조성 착수, 첨단의료기기 개발 본격 투자('26~'32, 9,408억 원)

## 1.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첫째,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였다.

① 정부 80여개 복지사업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4인가구 기준 6.51%)으로 인상을 결정('25.7.~)하고, 생계급여를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207.8만 원('25년 대비 12.7만 원↑)을 지급('26.1.~)하였다.

② 부양의무자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금액인 부양비를 의료급여 제도 도입 26년 만에 폐지하여, 저소득층 5천 명의 의료보장을 강화(' 26.1.~)하였다.

둘째, 국민 모두의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였다.

① 국민연금기금 설치(' 88) 이후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82%(' 25)를 달성하였다. 다변화된 포트폴리오 구성·운영과 국내 주식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연금지급액(' 25년 기준, 49.7조 원)의 약 5배인 231조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다.

② 청년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출산·군복무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강화하였다. 군복무 시에는 추가 인정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출산 시에는 첫째 아이 출산부터 12개월을 추가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기준 : 둘째부터 12개월)하였다.

\* 급여인상효과('26년 기준) : ▲(군복무) 월 25,740원 ↑, ▲(출산) 월 34,330원 ↑

③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을 완화('25년 납부재개자 → '26년 월 소득 80만 원 미만)하여, 총 98,763명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월 최대 37,950원, ' 26.1.~3. 실적)하였다.

④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하였다. 종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보다 많은 경우, 국민연금 지급액을 감액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자 다수가 생계비 마련 등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점 등을 고려, 근로·사업소득이 월 519만 원(' 26년 기준) 미만인 경우 감액대상에서 제외\*(' 26.6.~)하였다.

\* ('25)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25년 309만 원) 초과 시 감액 → ('26.6.) 월 소득이 A값+200만 원 미만('26년 기준 519만 원)이면 감액대상 제외(약 10만 명 혜택 예상)

## 셋째, 전 국민 먹거리 안전망인 그냥드림 코너를 전국 신속 확대하였다.

❶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 (1차 이용) 본인 확인 및 자가 진단표 작성 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시 물품 지원  
(2차 이용) 기본상담 진행 후 물품 지원, 추가 지원 필요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으로 연계  
(3차 이용)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추가 상담 완료 후, 지속적 지원 필요성 인정 시 이용 가능

❷ 민관협업을 통해 ' 25.12월 53개 시군구·56개소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 26.5.18일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158개 시군구·280개소 사업장으로 확대·운영 중이다. 사업 시행 5개월 동안(' 25.12.~ ' 26.4.) 총 97,926명에게 물품을 지원하였고, 이 중 10,255명을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 1,553가구를 발굴하였다.

## 넷째,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자활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❶ 노인일 자리를 역대 최대수준인 115.2만 개 제공하였다. 특히, 건강·소득·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1차 베이비붐 세대(' 55~ ' 63년생) 수요에 대응하여 노인역량활용형(기존 사회서비스형)을 가장 큰 폭으로 확대(전체 증가분의 67%, 3.7만 개)하였다.

❷ 장애인일 자리 지원대상을 전년 대비 2천 3백 명 확대된 3.58만 명에게 제공하였다. 특히,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직무유형도 3종 확대\* (' 25년 47→ ' 26년 50종)하였다.

\* 신규 직무유형 : ▲읽기 쉬운 자료 감수, ▲홍보 지원 업무,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❸ 저소득 청년의 자활준비 속도에 맞춘 자활지원을 위해 기초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하고 심리·정서지원을 신설하였다. 저소득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2.5만 명)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모집하였다.

\* 역량강화비 사용범위(자격증, 어학교육 → 업무 견학, 자존감 교육 등) 및 지원한도 확대(220→300만 원)

## 2.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첫째, 과학적 수급추계 및 민주적 논의에 기반하여 의대정원을 증원하였다.

① 2027~2031년 5년간 의대 입학정원 연평균 668명 증원(5년간 총 3,342명)을 결정('26.2.)하였다. 이번 의대정원 결정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수급추계 결과에 기반하였으며, 총 7차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25.12.~ '26.2.)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②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증원인력은 기존 의과대학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신설지역의대 신설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둘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6대 필수 입법을 완수하였다.

① (인력) 안정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인력 양성기반을 마련하였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법」을 제정('25.12.)하여,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2,942명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교재비·주거비 등을 지원받으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또한, 공공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을 제정('26.5.)하였으며, 203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공공의사인력이 본격적으로 배출되기 시작하는 2033년까지의 공백은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26.5월 기준, 4개 시도 87명)와 시니어의사\*\*('26.5월 기준, 136명)를 통해 보완해나가고 있다.

\* 필수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5년 이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 및 정주여건 지원

\*\*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 등에서 일정 경력 이상(종합병원 10년 이상 등)의 60세 이상의 퇴직 의사를 고용한 경우 채용지원금(전일제 월 1100백만 원, 시간제 월 400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

② (안전망)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였다. 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사망·의식불명 등 중대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법제화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다. 이와 함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하였다. 또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과실이 없고 손해배상을 완료한 경우 기소를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 ' 26.5.)

\* 분만사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의료계전문가 논의 통해 구체화 예정)

③ (인프라) 연간 1조 원 이상 지역·필수의료에 투자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지역필수의료법」 제정, ' 26.3.)하고, 국립대병원을 진료·교육·연구의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기반(「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 ' 26.2.)도 마련하였다.

④ (환자권리) 설명요구권·의료정보제공 결정권 등 12대 환자 기본권리를 확립하였다. 환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환자종합계획 수립·실태조사 실시 등 국가의 책무도 법률에 명시하였다. 아울러, 환자단체 등록 및 보호·육성 근거도 마련하였다.(「환자기본법」 제정, ' 26.4.)

### 셋째,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였다.

①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 26.3~' 26.5., 광주·전북·전남)하였다.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전국적으로 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이송체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② 소아진료 기반도 확충하였다. 경증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야간과 휴일에 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33개소(' 25.6월 115→' 26.4월 148개소), 소아 응급환자에게 365일 24시간 전문적인 응급진료를 제공하는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는 2개소 추가 확충(' 25년 12→' 26년 14개소)하였다. 아울러,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소아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도 새롭게 실시(' 26.4.~)하였다.

\*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에 연간 1.2억 원 지원(국비+지방비), '26.4.기준 13개소 운영

넷째,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❶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70개 신규 추가하고, 희귀·중증난치 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도 완화\*하였다(' 26.1.). 또한, 환자치료 접근성 향상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도 마련(' 26.3.)하였다.

\* 현장 요구가 높은 9개 질환(샤르코-마리-투스질환, 구리대사장애 관련 3개, 배체트병 관련 5개)은 검사 결과 없이도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임상진단+검사결과 → 임상진단+필요시 치료이력)

\*\* (주요내용)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지원, 약가유연계약제 도입, 필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제네릭 의약품 산정률 조정(53.55%→45%),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보상 강화 등

❷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 26.2.)하였다. 사회적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도수치료는 7월부터, 이후 방사선온열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관리급여 시행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였다. 그동안 지방·중소병원 등의 간호 인력 수급 악화를 우려하여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수를 4개로 제한하였으나, 국민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참여를 전면 허용(' 26.5.~)하였다.

### 3.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첫째,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였다.

❶ 통합돌봄 서비스 이전에는 국민이 정보를 직접 찾아보고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서비스 간 연계도 부족하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국 시행(' 26.3.27.~)됨에 따라,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상태 등 58개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의료·가사지원·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가 개인 맞춤형으로 연계·제공된다. 하루 평균 717명의 국민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 26.5.22.기준, 총 27,956명)하고 있으며, 1인당 약 3.3건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② 거동 불편 어르신 가정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찾아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229개 시군구(총 422개소)에 설치를 완료('26.2.)하였다. 아울러, 퇴원한 어르신이 지역사회에 건강히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기간(통상 3개월 이내)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집 모형 구축 시범사업도 착수('26.3.~)하였다.

### 둘째, 아동수당 확대 등 아이 키우기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다.

① 8세 미만까지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매년 1세씩 상향하여, '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수당을 월 5천 원~2만 원 추가 지급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 ('25) 8세 → ('26) 9세 → ('27) 10세 → ('28) 11세 → ('29) 12세 → ('30) 13세 미만

\*\* 지역별 금액(월, 만 원) : ▲(수도권)10, ▲(비수도권)10.5, ▲(인구감소)우대11/특별12(지역화폐 +1)

② 야간 나홀로 집에 아동을 방치하기 위해 전국 방과후 돌봄시설(지역 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중 343개소를 야간연장돌봄기관으로 지정하고, 22시 또는 24시까지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26.1.~)하였다.

③ 출생 미등록 아동이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수당 등 복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26.1.~)하였다. 아울러, 예비양부모의 편의 증진 및 입양절차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온라인 입양신청 도입, ▲입양기본교육 확대 등 입양절차도 개선하였다.

### 셋째, 장애인 돌봄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하였다.

①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활동 지원과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주간·방과후 활동 대상자 수를 확대\*하였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양질의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전문수당(월 5→20만 원)과 서비스 단가(주간활동서비스 단가의 150%→180%)를 대폭 인상('26.1.~)하였다.

\* ▲(주간) '25년 1.48만 명→'26년 1.65만 명, ▲(방과후) '25년 1.1만 명→'26년 1.2만 명

②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26.2.)하여, 장애친화 의료인프라 확충·어린이 재활의료 지원 확대·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증 장애아동의 치료 지원과 건강 개선을 위해, 전동 휠체어 등 장애아동 이동 지원 보조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신설하여 본인부담을 대폭 낮추었다(100→10%)('26.3.~).

③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전환하고, 존엄권·생활 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26.5.26.)하였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44개 지자체(10개 시도, 34개 시군구)\*로 확대하였다.

\* ('25) 35개 지자체(10개 시도, 25개 시군구) → ('26) 44개 지자체(10개 시도, 34개 시군구)

## 4. 잠재성장을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첫째, K-바이오헬스 수출액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① '25년 관세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바이오헬스(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수출액은 279억 달러로 '24년 대비 10.3%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K-바이오 백신·펀드 5,800억 원 조성('26.4.)과 적극적인 보건의료 주요 R&D 투자('25년 9,464억 원→'26년 1조 652억 원,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25년 제약·바이오 수출액은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104억 달러)하였다. 또한, 피부 빅데이터 구축, 수출국 정보 제공 및 한류 영향 등으로 '25년 K-뷰티 수출액은 역대 최고인 11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② 의료통역사·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양성 등을 기반으로, '09년 외국인환자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5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200만 명을 돌파(201만 명)하였다.

둘째,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바이오헬스 규제를 합리화하였다.

①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혁신적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허가 후 기존 기술 여부 확인만으로 시장 즉시 진입을 허용(' 26.1.)하여, 시장진입 기간을 최대 490일에서 최소 80일로 대폭 단축하였다.

②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와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난치 질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비임상시험자료 제출을 간소화\*\*하였다(' 25.12.). 아울러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를 승인(' 26.4.)하여 환자의 미충족 수요를 첨단재생의료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 기존의 심의·해석 사례 등을 고려하여 82개의 난치질환 예시 제공(가이드라인 마련)

\*\* 줄기·면역·체세포 등 세포 유형에 따라 불필요한 자료 제출 제외

\*\*\* 재발 위험이 높은 희귀 림프종 환자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가 면역세포 치료제

③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바이오 분야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발표(' 26.4.)하였다. 바이오 메가특구는 ▲첨단재생의료 심의 절차 완화 및 치료실시 요건 확대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 허용 ▲웰니스·뷰티 의료기기 허가 전 사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바이오헬스 산업별 육성전략을 확충하였다.

① (제약·바이오) 관계부처 합동으로 K-바이오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을 수립(' 25.9.)하고 실천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대형 제약사 2개사와 총 1조 4,5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 26.3.)하여 국내 임상시험 산업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개방형 혁신 활성화 기반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신약 임상 완주 및 글로벌 상업화에 투자하는 임상3상 특화펀드를 1,500억 원 규모로 조성예 착수(' 26.5.) 하였다.

\* 로슈 7,100억 원·일라이릴리 7,400억 원 규모 투자 유치 양해각서(MOU) 체결('26.3.)

② (의료기기)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의료기기 개발 및 필수의료기기 국산화에 착수(' 26~ '32)하였다.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 합동으로 7년간 총 9,408억 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을 통해, 기초 원천 연구부터 제품화·임상·인허가까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적극 지원한다. 사업 첫해인 2026년에는 국비 593억 원을 투입하여 106개의 신규 과제를 추진한다.

③ (의료 AI) 의료 인공지능(AI)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의료데이터 가공·분석비용 지원을 도입('25.7.)·확대('25년8→'26년40개소)하였다. 또한, 국민 일상 속 건강관리부터 대학병원급에서 제공하는 전문 의료서비스까지 보건의료 전주기에 걸쳐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하는 보건의료 AX 스프린트\* 사업에 착수('26.4.)하였다.

\* 상용화 이전 단계의 AI 응용제품의 현장 적용을 통한 빠른 확산 지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은 더 촘촘히 넓히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는 시간이었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별첨> 1. 국민주권정부 38대 대표성과

2.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실적(보건복지부 소관)

담당 부서 <총괄>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오상윤	(044-202-2310)
		담당자	서기관	정다솜	(044-202-2303)
담당 부서 <사회복지>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연숙	(044-202-3020)
		담당자	서기관	문달해	(044-202-3008)
담당 부서 <인구>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노정훈	(044-202-2360)
		담당자	서기관	정승연	(044-202-3363)
담당 부서 <보건의료>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성창현	(044-202-2420)
		담당자	사무관	김예슬	(044-202-2404)
담당 부서 <보건산업>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건훈	(044-202-2901)
		담당자	사무관	김정열	(044-202-2903)

